



경기금속 교육지 13-2호

■ 발행인 : 이규선 ■ 발행일 : 2024년 3월 22일 ■ 호수 : 13-2호 ■ 발행처 :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부

나라곳간 거덜내는 부자감세 대행진

임금노동자 근로소득세는 10년만에 최고치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세금을 깎아주니 좋은 것 아니냐고? 천만에.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재벌에 맞춰져 있다. 대표적 재벌감세는 법인세, 상속세, 투자지원 감세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다. 2023년 법인세 감소액은 23조 2천억이다. 작년 세수펄크가 56조원이 고 그 중 법인세가 절반이니 얼마나 막대한 규모인지 알 수 있다. 작년 경기가 안 좋아 기업실적이 떨어진 데다가 감세까지 해주었으니 23조나 법인세가 줄었다.

호시탐탐 상속세 완화를 노리던 윤석열이 상속세 완화방안을 추진할 경우 1조 2582억원까지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상속세 완화정책은 상공회의소 청부정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작년에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137개에 달하는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상속액이 10억원이 넘어야 발생한다. 실효율세로 따지면 상속세율은 평균 18%가 안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1년 연장되어 1조 4500억 원 규모의 세수감수가 예측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시설투자를 하면 임시로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돈을 벌겠다고 알아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 공평하고 실효성이

2024년 감세정책

감세항목	금액
증권거래세	2조원
금융투자소득세	1조5천억원
임시세액공제 연장	1조5천억원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기준상향	7천억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확대	3천억원
합계	6조원

있는가 의문이 따른다. 가뜰이나 세수펄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효과도 불분명한 이런 방식의 감세는 그냥 기업들에게 국민세금을 퍼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 감세 대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금노동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10년 새 최대치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원으로 재작년에 비해 1조 7천억원 늘었다. 다른 국세수입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부자감세로 나라곳간을 거덜내는 윤석열 정부를 시급히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이다.



“타임오프 감독 절반이 위법... 노동계 ILO협약 위반”

월간 노동법률_이재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2개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109개에서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근로감독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고 노조 옥죄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핑계로 사용자를 지휘해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2024년 2월호)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2010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낳기로 한도를 결정하였다. 조합원 49명 이하 사업장은 1000시간(연 0.5명), 99명 이하는 2000시간(연 1명)이 주어진다.

노사 자율에 맡길 노조 전임자 문제를 법률로 제한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 노동부는 회사가 노조에게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를 ‘노조의 자주성 침해’라고 하고 있으나 노조 전임자는 교섭과 투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이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는 “타임오프는 노사자율에 의해 결정할 문제로 기본협약 87호를 위반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타임오프 제도를 노사자율에 맡겨라”고 요구하고 있다.

“셈법 더 복잡해졌다... 野 유지한다는 ‘준연동형 비례제’ 뭐길래”

중앙일보_성지원 기자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선 253개 지역구 의석과 47개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뽑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별개인 병립형과 달리 연동형은 총 300석(지역구+비례대표)에서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가상 분배한 뒤(목표 의석), 각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목표 의석보다 적으면 모자란 의석만큼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총 의석수가 300석을 초과하기 일쑤다.

이를 보완하고자 변용한 게 모자란 의석 전부가 아닌, 그 중 절반만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준연동형 비례제’이다.

(2024년 2월 5일)

제22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확정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채우지 못한 의석을 비례대표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채워주는 제도이다. 정당 득표율에서 10%를 했으면 전체 의석의 10%인 30석을 채워준다.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이상으로 대거 당선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지 못한다.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소수정당에게 유리하다.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는 효과가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에서 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채워주는 절충안이다. 정당 득표 10%를 했으면 연동형처럼 30석이 아니라 그 절반인 15석을 채워준다.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 5석을 준다.